

중국어선 날로 흉포화... 정부는 입으로만 단속

고장나고 느린 단정 교체작업 4년째 지지부진 단속 매뉴얼 못지키고 적은 인원 위험한 진압 해경 해체 방침 여파에 사기마저 뚝 떨어져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1년 불법 조업 현장에서 숨진 인천해경 이창호 경사 사망 사건이라는 비극이 일어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무관심이 겹쳐지면서 날이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에 저항하는 우리측 바다는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발생한 중국 선원 사망 사건도 고장난 고속 단정 때문에 규정보다 적은 인원만 작전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단속 매뉴얼에 정해진 인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현장 기동대원만을 투입, 망치를 휘두르며 날뛰는 중국 어민들이 가득한 어선에 올라보내는 위험을 감수했다가 가스가소 탈출하는 '골육'을 당했다.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당시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1508함(1500t)은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투입될 경우 '15명을 투입해야한다'는 단속 매뉴얼을 어긴 채 10명만 불법 중국어선에 올라보내 진압을 시도했다. 1508 함 내 15명의 진압 요원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한꺼번에 투입시킬 고속 단정(10m급)이 고

장나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단정 1척(6.5m급)도 정부가 2011년 내놓은 '불법조업 방지 대책'에 따라 교체돼야 하지만 시행되지 못하면서 3명, 4명, 3명씩 3차례로 나눠 투입시키는 '위험'을 무릅썼다.

결국 규정보다 적게 투입된 특수기동대원들은 흥기를 들고 잔인하게 날뛰는 100여명의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탄까지 쏘며 맞서다 끝내 나포된 중국 어선에서 '탈출'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낱알이 흉포화되면서 진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어선(속도 통상 20노트 이상)보다 빠른 고속 단정으로 교체하는 한편, 해경 특수기동대원을 총원하는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목포해경 소속 6척의 대형 함정이 갖춘 단정 12척 가운데 20노트 이상 달리는 중국 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10m급 단정은 단 3척에 그친다. 10m급 단정은 ▲최대 승선인원 9명(단정 운용 요원 3명 제외)에 이르고 ▲최고 속도도 중국어선보다 빠른 40노트(시속 74km)에 ▲단정 높이가 높아 해경이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쉽다.

목포해경 보유 단정 12척 보니

10m급 3척·8.5m급 1척
7.7m급 4척·6.5m급 4척

- 10m급 단정
최대 승선인원 9명·40노트
중국어선보다 빨라
- 나머지 단정
최대 승선인원 3~6명·20노트
한꺼번에 진압요원 투입 못해

나머지 9척의 단정은 6.5m급 4척, 7.7m급 4척, 8.5m급 1척 등으로, 최고 속도도 20노트(시속 37km) 안팎에 불과하고 승선인원도 3~6명 수준이라 선단을 이뤄 한꺼번에 달려드는 중국 어민들을 대적하기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실정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압은 커녕, 단속 매뉴얼조차 무시한 채 목숨을 내놓고 단속 활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이유다.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도 마찬가지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13척의 어업 지도선이 있지만 승선 인원이 13~15명으로 적고, 장비도 전자 충격기, 가스총, 3단봉 등에 불과, 중국 선원들을 피해 다니며 단속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진화하는 중국 어선에 맞선 효과적 단속 전략도 가지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기존에 망치·손도끼로 무장하고 배에 침판을 두르고 쇠파스를 설치하는 등 흉포화된 저항 방식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조업 위주에 눈속임을 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아슬아슬하게 즐기기하며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까지 동원하는 어선들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단속 경찰 설명이다.

쇠창살이 설치된 어선에 올라타 단속하는 방법, 수습할 때를 이뤄 저항하는 경우 어선 바로 위까지 헬기를 동원, 바깥의 헬기를 벌여 흐트러트린 뒤 단속에서 내서는 전략 정도다.

하지만 승선을 막기 위해 배에 침판을 두르는 어선을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중이다. 해경 측은 지난해 5월 침판을 두른 어선을 실제 제작, 진압 연습을 실시하는 등 신성 저항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 결쇄형 사다리를 특수 제작해 침판에 걸쳐 단속 어선에 올라타 뒤 제압하는 방법 등이 집중 논의됐지만 시범 공급만 이뤄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어선의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뒤 해경 해체 방침이 확정된 것도 해경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땀 당선 무효

노회용(52)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노 청장이 첫 사례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한)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노 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허용하면 선거가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 금액이 1인당 200달러로 적지 않고 의례적·관례적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노 청장이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거를 앞두고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만 연수를 기회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돈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돈의 성격이 '여비', '장도금' 등 관행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기부행위가 선거일까지 7개월여 남아 있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특정한 발언, 행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점은 기부행위의 폐단, 선거 투명성·공정성 훼손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연수에 동행,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박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해경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액수도 날짜도 정확하지 않은데... 오늘 국민배심원들의 선택 '주목'

돈을 받았을까. 그 돈은 뇌물로 봐야 할까. 죄인으로 억울하게 풀리는 건 아닐까. 국민배심원들의 선택은?

13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한) 심리로 열린 여수해경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A(51)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국민배심원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검찰 기소 내용만 보면 간단한 사건인 듯 하다. 해경 방재담당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08년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방재업체 사무실에서 일한 대표 B(59)씨에게 해상 방재업무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범정에 섰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치만 않다. A씨 주장부터 전혀 다르다.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는 다른 직원들과 광주로 출장이 있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B씨에게 지난 2008년 8월 2000만원을 '차용'한 적은 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제적 힘든 상황을 벗어 나기 위해 부인이 가게를 열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빌린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뇌물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날짜에 A씨가 출장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방재업무에 편의를 봐준 것도 있지만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동생' 같은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해주고 2500만원을 그냥 건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더라도 (여유가 있는 만큼) 개이지 않았다는 의도였다고 했다. 6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 확정적이지 않지만 3300만원이 세 차례로 나눠 인출된 회사 서류를 보더라도 (검찰 주장대로) 이틀에 걸쳐 나눠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B씨 생각이다.

현재까지로는 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이 주장하는 액수, 검찰이 공소 사실이 전혀 다르다. 받은 날짜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배심원들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현금 수수를 인정할 점을 근거로 당시 회사 인출 서류 등을 작성한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수수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일 경우 형량(징역 5년 이하)에 견줘 3000만원 이상(5년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당시 함께 출장간 직원 등을 불러내 방어 논리를 펴는데 공을 들이려는 한편, 직무와 상관 없는 돈이라는 논리로 배심원들을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배심원들의 선택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14일 오후 재판에서 드러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13일 광주시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우선접종 대상자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지역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축화화분 옮길거야" 손찌검한 이사장

○축의 7080 총장축제의 폐막식에서 자신이 보낸 화분이 잘 보이도록 무대 앞 가운데 자리로 옮기던 중 경호원에게 저지당하자 손찌검을 한 현직 사단법인 이사장이 경찰서 행.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모 단체 사단법인 이사장인 강모(53)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경 광주시 동구 총장축제 폐막식 무대 앞에서 사설경호원 최모(3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

○강씨는 자신이 보낸 축화화분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무대 앞 중앙으로 화분을 옮기던 중 경호원이 제지라도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순간 화가 났는데, 경찰에서 "(죄자가) 밀치면서 나도 다쳤다"며 억울함을 호소.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광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4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채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아파트]							
2014타경 16089	1	서구 금호동 767 금호2지구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204동 13층 1304호 59.94㎡		아파트	143,000,000	143,000,000	최선순위권지대권 설정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있음
[기타]							
2014타경 13745	1	담양군 화산면 중월리 460-1 748㎡ 담양군 화산면 중월리 96-199.95㎡ 87.55㎡ 36.05㎡ 부속건물 관리사33.10㎡ 제시외 화장실 1.17㎡		공용장지	99,326,500	99,326,5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차인 경유지권신고인있음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11251	2	담양군 남면 구산리 126 945㎡ 동소 126-3 1167㎡		전	91,626,000	91,626,000	일괄매각, 목축19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1718	1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154-6 3000㎡ 제시외 비닐하우스 4동 [제시외비닐하우스시설4동포함]		답	67,194,000	67,19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년3912[병합]
2014타경 12605	1	장성군 장성읍 용리리 산12-3 298㎡ 동소 산13-1 3225㎡ 동소 산13-5 1759㎡ 동소 산15-1 22314㎡ [물건번호1:목축3,4분묘소재물건외지권설정일자있음]		임야	5,108,060	5,108,060	지분매각, 일괄매각, 목축1-4합동구역지목,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공유자감경화지분11분의2연부
2014타경 14335	1	나주시동광면장동리530 621㎡ [보유소재, 분묘기타권설정일자있음, 수목포함, 일괄매각]		전	6,126,900	6,126,9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6256	1	화순군 동백면 가수리 631 1000㎡		답	12,000,000	12,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채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담양군 남면 구산리 193 2574㎡ 동소 193-1 79㎡ 동소 195-3 474㎡ 제시외 차장면적 32.2㎡ 동소 199-1 126㎡ 동소 200-2 568㎡ 동소 202-1 1호 1층339.64㎡ 2층96.60㎡ 동소 202-1 2호 159.97㎡ 동소 202-1 3호 42.39㎡ 제시외 다용도실 19.4㎡ 동소 202-1 4호 1층114.15㎡ 2층51.60㎡ 3층45.02㎡ 2층70.09㎡ 제시외수탕10.52㎡ 동소 202-1 5호 44.00㎡ 제시외 방 16㎡ 제시외 다용도실 29.4㎡ 동소 202-1 7호 37.8㎡ 제시외 방 18㎡ 동소 202-1 8호 1층113.34㎡ 2층163.52㎡ 3층59.5㎡ 사무소, 제시외 통로 20㎡ 동소 202-1 9호 93.9㎡ 제시외 기실55.5㎡ 동소 202-1 17호 호 화장실, 샤워실 1층36.4㎡ 2층61.3㎡ 동소 202-1 3메이 동소 202-1 3호 1층39.75㎡ 2층36.78㎡ 동소 195-1 407㎡ 동소 195-1 491㎡ 동소 202-1 가동호 1-4층각168㎡ 제시외 테라스 245㎡ [현황일부미상] 동소 202-1 나동호 14.56㎡ 동소 202-1 다동호 10.56㎡ [실측면적13.8㎡] 창고시설		대	3,243,652, 180, 17, 18 [18일단지]	3,243,652, 180	일괄매각, 목축1-5수목포함, 임차인있음, 제시외 건물포함, 일부건물공부하현황상1, 목축61목축16시동, 다동건물일부및목축16메이동건물전부16메이동건물전부
2014타경 11251	1	동구 학동 523-9 204㎡ 동구 필문대로 337 1층120.09㎡ 점포 2-3층 각 120.09㎡ 4층63.63㎡ 주차, 계단실 지하실 ,다발107.61㎡ 제시외 부속 등 10㎡		대	408,106,680	408,106,6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 공유자가 민사합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이반으로 실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0. 28.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1. 5.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 입찰방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번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률 등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된 차입금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률 10%)를 준비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기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개찰을 실시한다.

○ 최고기매수신청과 최소매수신청인만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출품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가격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과기일에 매각자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자가 기일매각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까지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간은 최종 매각결과기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확정한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반 매수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납부하면 대금지급부로서 유효하며, 미납액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기입부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에나 기입부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공채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본 을 첨부하고, 국민주택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방하여 위 등기를 축약하여 준다.

○ 매각대금 납부완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채자 또는 당해부동산 부동산 중의 하나에 대하여 주지 아니하면 방하여 인도영양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최선순위의 자방과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변경신청을 하고 그 후 그 후 그 후 있는 임차인이나, 사외 지분등 설정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입찰방에 발행된 채권과 관련하여 매각기일 이후 잔여 매각대금 신청서, 현물보증금고지서 및 물가등의 서면 등을 우편발행 민사합법(신청)과에 비치하여 발송한 채권과 있으므로 미리 발송하여 청산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각종 지장권, 기입부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에나 기입부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공채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본 을 첨부하고, 국민주택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방하여 위 등기를 축약하여 준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영양을 신청하는 날의 경우에는 최고기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과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공고된 매각조건에 매각기일 전에 변경사항이 확인되거나 집합회 취소·정리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 신청을 공고하는 날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하며, 축약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없는 게시방 의 공고나 입찰에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 납부후에 잔여 채무자, 채무자를 방하여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일 공고일 외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민사합법] → 민법명령장부작성

○ 민법명령장부작성에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최고매각가격이 있다(타당) 수열 국민참여재판에 위하여 민선 6기후에 2014년 10월 14일 14시 00분 까지,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바로 매각결과기일 전(매각결과기일 전)에 행정청장에게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중상이는 물건을 관하여는 반드시 민법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선주태